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 논란

16, 1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적 인플레이션
대책의 실패

5면

서울 퀴어퍼레이드와
우파의 성소수자 혐오

6~7면

그리스
시리자 몰락의 교훈

8~10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최무영 교수 인터뷰 2~3면

반대 서명 동참한

전교조 서울지부 수사 말라 4면



홍준표·오세훈 등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퀴어 퍼레이드를 지지하자

관련 기사 6~7면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말한다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다. 정부 측 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억누르려 한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한 **최무영 교수**를 만나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과학적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최무영 교수는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 저자이고 《서울대 명품 강의》 공저자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하겠다는데 정부 브리핑에 나오는 학자들은 다들 안전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답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확히 지금 현황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무슨 ‘시찰단’인지 뭔지 가서 봤다고 하지만, 가서 시료를 전혀 채취하지도 못했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말만 듣고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실제로 검증해서 공개된 경우가 하나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데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문가들의 패널 보고서가 있어요.(이하 PIF 보고서) 그 문서를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요. 요약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의 보고는 너무 엉터리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염수 안에 방사성 핵종(원자)이 몇 가지가 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대표적으로 6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64가지 중에 사실상 9개만 검사한 결과를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들에게 보내 줬다는 겁니다. 55개는 검사를 전혀 안 한 거죠.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측정 방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탱크에 오염수를 가둬 놓으면 오염물질은 대부분 밑에 가라앉았을 테니 어느 정도 섞어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 위의 물만 채취했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것을 채취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처리한 뒤의 물’이거든요. 그것이 생체와 바다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PIF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물을 100배, 1000배 섞어서 버리니까 굉장히 농도가 낮다고 하는데 이걸 사실 참 우스운 얘기죠.

희석하지 않고 그냥 버려도 어차피 바다에 희석될 텐데 왜 굳이 미리 바닷물로 희석한 다음에 버릴까요?

사실은 희석한 농도를 측정해서 방사능이 굉장히 약해진 것처럼 보고하고 버리겠다는 얘기에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인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단체는 핵발전을 하는 국가의 대표들, 핵발전 산업의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이고 핵발전을 퍼뜨리는 이익 집단이네요. PIF 보고서에도 ‘IAEA가 검증을 전혀 안 했다. 제대로 된 측정 방식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실망스럽다’ 하는 것이 아주 명확히 적혀 있어요.

정부 발표나 언론을 보면 그래도 과학을 전공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확인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시나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일단 핵공학자, 그러니까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핵공학자분들은 이걸 얘기할 자격이 좀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핵발전에 대한 이해는 있겠지만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죠.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면 사실 생태학자가 가장 주된 구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자도 이런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이죠.

보통 기존의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현재의 자연적인 생태를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방사성 물



“핵공학자는 물론이고 생태학자들도 이런 초유의 사태가 끼칠 영향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질을 엄청나게 바다에 배출하고 투기했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사실 처음 겪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니깐요.

바다에 버렸을 때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퍼져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하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등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서 했다는 건데요.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해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둘의 결론이 거의 반대에 가까워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런 여러 매개 변수들을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의 흐름이라는 게 제 전공 용어로 말하면 비선형성이 있고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연구에서 심층수까지 다 포함하고 굉장히 많은 걸 고려했으니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확해

지는 정도의 문제라면 일기예보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야 될 거예요.

일본 정부나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구요.

제가 보기에는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걱정이 되면서도 정부가 ‘과학’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학을 너무 이상하게 선전하다 보니까 과학이 만능이고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때로는 상당히 무능력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현대 과학이 전문화 경향이 너무 심해져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후쿠시마 사고도 그렇지만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너무 전문화

▶ 3면으로 이어짐

▶ 2면에서 이어짐

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실제 과학자들은 어느 한 분야밖에 모르죠.

그러면 전체 연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위험성이라는 것도 자기 분야만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걸쳐 있는 위험성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해 과학이 말해 주는 건,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주시해야 하는 거죠. 위험한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일단 위험하다고 전제하는 게 과학적 태도입니다.

‘위험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가장 비과학적인 주장이에요.

또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려면 첫째로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재현성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과학적이라고 말하려면 일본에서 시료를 어디나 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비판하면 괴담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과학의 ABC도 모르는 거죠.

이런 개방성에 더해 재현성, 정량성, 보편성 같은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철저히 비과학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공개된 것 중에는 PIF 보고서라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PIF 보고서에서 권고한 게 있습니다.

‘일단 바다에 버리지 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알프스가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하지만 세슘은 제거한다고 공언했는데요.



일체의 검증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도, 비판하면 괴담이라는 한국 정부도 '과학'의 근본 전제를 무시하고 있다

먼저 제거 못 하는 게 삼중수소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보고만 보더라도 세슘은 그래도 잘 제거하는 편이지만 스트론튬이나 요오드 등 대부분의 핵종은 제거를 못하더라고요.

세슘도 많이 제거한다는 게 한 70~80퍼센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세슘이 20~30퍼센트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삼중수소는 물에 있는 성분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괴담입니다. 물론 물에도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주위에서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해양 생물의 몸에 농축될 수가 있거든요. 또, 삼중수소가 유기물의 일부가 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배출되지 않고 잡혀 있어서 계속 방사선을 방출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건 핵공학자들은 모르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쯤 되니까 100년 정도 가뒀 두면 충분히 안전해지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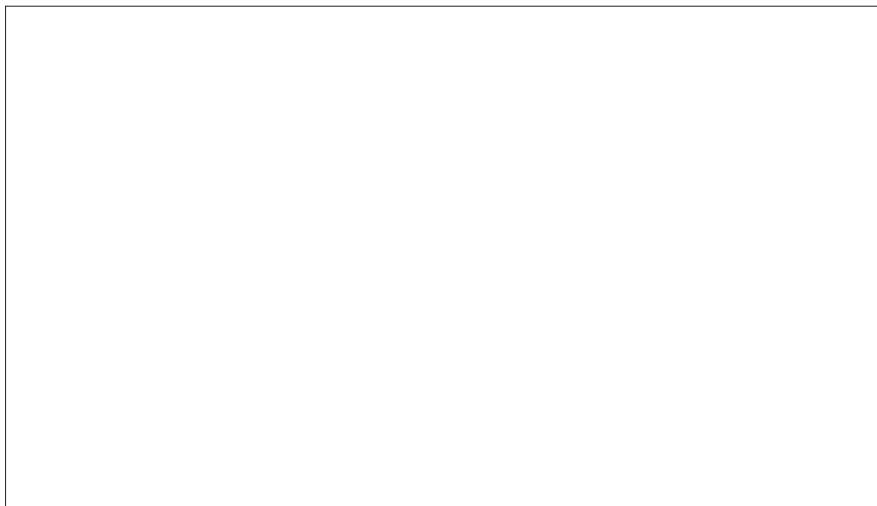
또 어떤 특정한 생물체들은 방사성 물질을 농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농축시켜서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죠.

아예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환경에 차폐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지금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적은 건 확실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나? 그게 참 이상하죠.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게 비용이 적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만 되뇌이는 한국 정부의 일일 브리핑

들지도 않아요. 바로 버리면 비용이 거의 안 들지만 지금 보듯이 터널을 길게 파서 버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버리는 것은 명백하게 해양법 위반이거든요.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비용도 상당히 들고 일본 어민들에게 하는 피해 보상도 다 치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추측일 뿐이지만 제 생각에 일본 정부는 이걸 빨리 일본 땅에서 없애고 싶은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예튼 빨리 없애서 일본 땅은 완전히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 안 보이게 만들겠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세계에다가 그냥 떠넘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에 재처리 시설이 있는데 로카쇼무라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핵 연료 타고 남은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는 건데요.

말로는 그걸로 목스(MOX)라는 혼합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핵발전엔 쓰겠다는 거지만 그게 핵폭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처리 시설이 굉장히 위험해요. 로카쇼무라는 사실 사고가 여러 번 나서 아직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고가 워낙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간 돈만 해도 아마 한 30조 원이거든요.

그래도 계속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 데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그걸 제대로 가동하면 후쿠시마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아마 후쿠시마가 전례가 돼서 그것도 다 방류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라고 안 하겠어요? 골칫거리를 자기 땅에 갖고 있느니 그냥 다 방류해 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일상적인 업무 연락과 노동조합 활동 등을 홍보하는데 활용해 온 K-에듀파인 업무메일을 이용해 서명 링크를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서명 참여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교사들이 내부 메신저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행사 협조, 자율연수 홍보, 노사 교섭 사항 안내 등이 이뤄져 왔다.

서울시교육청 교직원들이 이런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도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가 없다.

입막음

무엇보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에 관해 서명을 받고자 한 활동을 두고 불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연락에는 수신 거부 절차 등에 관한 안내도 포함됐다.

노동조합이 서명을 받고 노동자들이 서명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억압적인지 보여 줄 뿐이다.

정작 권력자들과 최고위 공직자들은 자유롭게 누리는 정치적 기본권이 하위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는 금지돼 있는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

정부는 정작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는 하지도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는 억누르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법과 고발로 막으려는 자들이 반민주 세력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이전에도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을 뿐이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수신 거부 절차까지 안내한 서명 링크를 두고 개인정보 운운하는 꼴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하려 함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는 가뜰이나 커지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칠까 봐 입막음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과학' 운운하면서도 과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문제 제기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교조와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정부의 입막음 시도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역사는 전교조에 불법 딱지를 붙이던 자들이야말로 불법적인 정치권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력

의 하수인 역할을 거부하던 전교조 결성 시기가 그랬고, '미친 소, 미친 교육'을 반대하던 때가 그랬고, 친일·독재 미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던 때가 그랬으며, 평형수를 빼내고 해군기지 철근을 과적하며 생때같은 학생들 250명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정권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면 불법이다’ 하고 협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도 많고 방사능 수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중수소뿐 아니라 세슘이니 스트론튬이니 하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얼마나 더 많은 방사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기네가 개발한 정화장치인 알프스에 고장이 있었다는 것이나 흡착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거나 하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서명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이 위헌입니다. 특정 정당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과 고발로 막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반민주 세력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위협하

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문’ 온라인 서명운동을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운동에는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온라인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 대상 계기수업[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활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목소리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

장호중

이 기사는 발행 뒤인 6월 23일에 일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5월 고용률: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청년 취업난은 악화

★ 마크롱이 파업을 물리치게 놔둔 프랑스 노조 지도자들의 책임 회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먹히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인플레이 대책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해법”이 먹히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지난 18개월 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지배해 온 쟁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였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은 신자유주의 정설에 따른 처방을 엄격하게 실행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처방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 곡선에 따르면 물가와 실업률은 길항 관계다.

이것이 참말이라면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실업률을 높여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더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지 않은 노동자도 실질 임금을 지킬 자신이 없어지고, 그 결과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현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은 지난달 이렇게 시인했다. “임금은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아닌 것 같다.”

지난주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유럽중앙은행은 올렸다. 영국 중앙은행도 다가오는 목요일에 금리를 올릴 공산이 크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언헤지드’ 칼럼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는 자명한 경험적 이유가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실업은 낮게 유지됐다. 필립스 곡선은 … 최근 현실에 들어맞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인 미국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은 지난달 이렇게 시인했다. “임금은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아닌 것 같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대기업들은 공급 차질 속에서도 가격을 올려 이윤을 지켰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않는다.” 누군가 트위터에서 “들어맞은 적이 있거나 한가요?” 하고 묻자 그 칼럼의 공저자 로버트 암스트롱은 “대체로 말하면, 없습니다” 하고 답했다.

이는 1980년대 이래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그 위기의 또 다른 징후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인 이자벨라 베버의 주장이 불러일으킨 관심이다. 그 관심은 대부분 적대적이었다.

일전에 그녀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이 제2차세계대전 말에 도입된 물가 통제 같은 조처라고 주장하는 글을 <가디언>에 기고했을 때 베버는 “멍청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최근 <뉴욕커>에 베버의 또 다른 글이 실리자 비난이 다시 봇물 터지듯 나왔다. 베버가 누리는 명성에 대한 시기과 성차별이 명백히 비난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베버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베버와 에번 와이스너는 “판매자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특이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미하우 칼레츠키와, 니컬러스 칼도르 등의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과 경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다.

그들의 주장인즉,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대기업들이 집단으로 이윤을 지키고 물가 상승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판매자 인플레이션”

그동안 세계경제는 팬데믹이 낳은 공급 사슬 병목, 가스·석유 확보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차질을 겪었다. 이런 형태의 차질은 대기업들이 쉽게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어느 대기업도 가격 인하 경쟁에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 물가를 따라잡으려는 절박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베버와 와이스너는 지금의 물가 고공행진이 정점을 찍었다는 징후들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한다. “우리는 비상사태가 겹겹이 터지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시기에 살고 있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기후 변화는 현실이며, 지정학적 긴장이 쌓이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쇼크가 찾아올 공산이 크다.”

물론 기후 변화는 “쇼크”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에 가깝다. 폭염이 흉작을 낳고 흉작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어떤 경제는 다른 경제보다 취약하다. 영국 국채 금리는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 시장은 영국 중앙은행이 한동안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데에 베팅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여전히 필립스 곡선을 신봉한다. 그래서, 지난 2~4월의 전년 대비 평균 임금 인상률이 7.2퍼센트에 이르자 그는 임금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베일리의 공격(금리 인상)은 내년 경기후퇴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납부기간이 끝나 상환 조건을 재협상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 인상은 매우 안 좋은 소식일 것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다음 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갹신하는 영국 가구들은 한 해 이자 비용이 평균 2900파운드[약 476만 원] 늘어난다. [현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보리스 존슨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보리스 존슨 정부는 영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자금 공급 정책에 기대어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리즈 트러스 정부의 야심 찬 재정 확대 계획은 실패했다. 새로 들어선 수낙 정부에게는 인기 없는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 Alex Callinicos, 'Neoliberal response to inflation still fails'(2023. 6. 20) / 번역 이원웅

성소수자 혐오 우파 정치인들에 맞서

서울 퀴어퍼레이드의 성대한 개최를 바란다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우파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월 17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를 두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행사를 무리하게 막아서 경찰과 충돌까지 빚었다.

홍준표는 행사 이전부터 퀴어퍼레이드를 공공연히 비난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

이는 교활한 갈라치기이다. 그러나 홍준표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익은 보장해 왔던가? 홍준표가 그간 저질러 온 수많은 악행들(공공의료 파괴, 복지 삭감 등) 모두 노동계급 등 서민(성소수자 포함)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성소수자와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홍준표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옹호한 것 때문에 최근 기독교 우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를 보여 줘서 기독교 우파 측의 반발을 무마하고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었던 듯하다.

7월 1일 개최 예정인 서울 퀴어퍼레이드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방해로 서울광장에서 밀려나 을지로에서 개최된



퀴어퍼레이드는 대표적 성소수자 행사로 자리잡아 왔다

다. 서울 퀴어퍼레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매해 서울광장에서 열렸었다.

지난해 오세훈은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허락했다가 보수 기독교 세력에게서 “박원순 때와 뭐가 달라졌냐”며 지탄받은 바 있다. 올해 오세훈은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날짜에 광장 사용을 신

청했을 게 뻔한 기독교 단체에 서울광장을 내줬고,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 성소수자 행사로 자리잡아 왔다. 그래서 더욱 우파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성소수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서울광장 사용 불허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성소수자 단체 소속 대학생 120여 명이 신촌 거리로 나와 서울시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층 결집

최근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들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약 시도가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 7곳 중 4곳이 그런 곳이다.

기독교 우파는 “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여 왔고, 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를 돕고 있다.

2017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가 우파 결집을 위한 쟁점 중 하나로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온 뒤부터, 공식 정치 무대에서 우파 정치인들에게 ‘동성애 반대’는 하나의 표지가 됐다.

우파 정치인들은 ‘동성애 반대’를 내세워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중을 분

열시키려 한다.

한편 민주당 정치인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체로 침묵·회피해 왔고 일부는 혐오에 동조했다. 민주당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면서도 보수층을 의식해 차별을 개선하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기는 꺼렸다. 의회 다수파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사코 회피하고 있다.

물론 우파의 공격에도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여론은 증가해 왔다. 올해 5월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라고 답한 사람이 51퍼센트, 동성혼 찬성이 40퍼센트였다. 이런 비율은 증가 추세다. 젊은 층에서는 우호적 여론이 상당히 높는데,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늘어난 영향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파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성소수자 혐오는 성소수자 전반과, 특히 취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성취하는 데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우파의 혐오·차별에 맞서 올해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만만치 않게 세를 유지하며 개최되길 바란다.

더불어 홍준표, 오세훈 등 우파 정치인들이 단지 성소수자에게만 적은 아니다. 우파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차별을 개선하려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에 노동계급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

성지현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사진 출처: ACLU Indiana

취약한 트랜스젠더들이 극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극우 부상 속에서 공격받는 세계 성소수자들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주류 정치가 우경화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일부 우파는 성소수자(LGBT+) 권리, 낙태권, 인종차별 같은 문제에서 '문화 전쟁' 전략을 펼쳤다.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며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보수적 의제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함이다.

강경 우익이 집권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눈에 띄는 사례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3년 전 대선에서 "LGBT는 공산주의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100곳 이상을 '성소수자 없는 도시'로 선포했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커다란 반발과 저항으로 현재 약 40개 도시가 이를 철회했다.)

헝가리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은 "LGBT 이데올로기"에 맞서 헝가리 전통과 가족을 수호한다고 내세웠다. 그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금지, 성별 정정 금지, 청소년 젠더 교육 금지 등 집권 내내 성소수자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비단 권위주의

적 국가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대외적으로 '성소수자의 친구'를 내세우는 나라에서도 성소수자는 우파의 공격 초점이 됐다.

미국 성소수자 "비상사태"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다. 공화당이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러 주에서 성소수자 공격이 강화됐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올해 6월 "사상 최초로 미국 성소수자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만 41개 주에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525개 법이 발의됐고, 70개 이상이 통과됐다. 역대 최다 수치다.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

23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가 금지됐고, 20개 주에서 청소년(일부 주는 성인까지도)의 성별 정정 치료가 금지됐다. 10개 주에서 학생들은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라커룸 등을 이용할 수 없다. 6개 주에서는 학교에서 젠더 교육이 금지됐다. 또, 6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을 지칭하는 성별 인칭대명사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런 공격의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다. 당장 시급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트랜스젠더들은 스스로 호르몬 치료를 하도록 내몰릴 것이다. 일부는 고향을 떠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HCR이 한 인터뷰에서 몬태나 주에 사는 트랜스젠더 부모 메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난민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몬태나 주에서 관찰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또, 몬태나 주에는 우리를 돌봐 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느낌입니다."

체계적 차별

성소수자 관련 법과 제도가 상당히 개선된 나라에서도 체계적 차별 속에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흔히 더 취약한 처지에

있다.

지난해 스웨덴에서 정부 기관 '청년과 시민사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16~25세의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을 고려했다. 보고서는 젊은 성소수자들이 괴롭힘, 위협, 모욕에 흔히 노출돼 있고, 일반 젊은이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안 좋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1987년부터 성소수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다.

국제 성소수자 단체 ILGA 유럽은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도 증오범죄가 늘었다. 특히 트랜스젠더가 표적이 됐다. 극우와 주류 우파 정치인들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공격하면서 트랜스젠더 혐오를 부추긴 결과다.

나라마다 종교·문화적 특징, 위기의 수준, 지배계급의 지배 전략, 무엇보다 계급 세력 관계나 투쟁에 따라 차별의 정도와 양상이 다르지만, 성소수자 차별은 자본주의에 뿌리박힌 특징이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투쟁이 효과적이라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성지현

그리스 시리자 몰락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는 격렬한 긴축 반대 투쟁을 배경으로 부상해 큰 기대를 모았고, 2015년 집권까지 했다. 그러나 그 후, 그리스 대중의 긴축 반대 염원을 배신해서 정권을 잃었고, 최근 그리스 총선에서도 심각한 패배를 겪었다.

다음은 시리자 집권 반년째인 2015년 7월 11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시리자 내 좌파인 스타티스 쿠벨라키스의 패널 토론에서 캘리니코스가 한 연설을 녹취·번역한 것이다.(쿠벨라키스가 한 연설의 영문 녹취는 본지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토론회 하루 전날 시리자 정부는 의회에서 유럽연합(EU)의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논쟁은 시리자의 개혁 배신에 맞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은 무엇이여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는 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쿠벨라키스 동지가 논점을 명확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듯 이 자리는 우리가 두 번 째로 논쟁하는 자리입니다. 첫 논쟁을 했던 지난 2월은 시리자 정부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들의 모임)과의 첫 협상을 타결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에서 경악스러운 안전[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찬성 표결한 바로 다음 날 맞붙게 됐네요. 두 사건은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데, 지난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합의는 지금 시리자 정부가 EU의 긴축 프로그램에 무릎 꿇는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쿠벨라키스 동지만큼이나 속상합니다. 지금 그리스와 유럽 지역의 좌파와 노동계급은 커다란 후퇴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각종 논쟁에서 어떤 상이한 입장을 취했든 간에 지금은 반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후퇴를 겪고 있다고 해서 다음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난 1월 그리스 총선 이후의 경험은 40년 전 포르투갈 혁명 이래 유럽의 좌파와 노동자 운동이 겪은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혁명은 유럽의 계급투쟁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노동자와 병사들은 혁명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리자는 급진좌파들이 전략 차이를 갖고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주장으로 호응을 얻었다

그리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사적 비교 대상이 그만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일요일은 정말이지 대단히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지난 일요일”은 시리자 정부가 EU의 긴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날로, 반대표가 다수로 나온 때였다.] 그야말로 “그람시적 모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노동계급이 노동계급 자신을 넘어 사회의 더 광범한 부분들에게서 주도권을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일요일

국민투표에서 62퍼센트가 긴축 거부에 투표한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동계급이 영세 상인, 농민 등 사회의 다른 부분들을 긴축 거부 쪽으로 끌어당긴 것이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저의 가장 근본적 이견 하나는 전략에 대한 [쿠벨라키스] 동지의 논의나 급진적 태도에 관한 동지의 논의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막 결승전이 종료됐다는 견해에 근본적 이견이 있습니다.[쿠벨라키스는 시리자 집권을 “계급 투쟁이라는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전에 진출한 것”에 비유하고 이 토론회 전날 시리자의 긴축안 통과를 “경기 종료”



시리자와 그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2010년대 부상했던 '좌파적 개혁주의'의 대표 주자였다

에 비유했다.] 지난 일요일에 벌어진 일을 떠올려 볼 때,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의 본질

그리스의 비범한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 경험은 EU에 관해 무엇을 알게 해 줬습니까? 쿠벨라키스 동지도 말했듯이, 좌파의 다수는 EU가 진보적 기구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치프라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협박은 EU의 전통이 아니다. 연대와 민주주의가 EU의 전통이다.” 이것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EU는 기능장애에 빠진 제국주의의 지망 세력입니다. 회원국 간 갈등이 워낙 심각해서 응집력 있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무자비하게 긴축을 강요할 능력은 있다는 것, 특히 유럽 내에서 비교적 취약한 경제를 상대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아마 내년쯤 치러질 블랙리스트 국민투표에서 취할 입장을 놓고 내부 토론 중인데, EU 잔류 주장도 분명 있을 테지만 저는 우리가 EU 탈퇴에 투표해야



그리스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긴축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시리자는 이를 배신했다. 시리자의 긴축 합의를 규탄하는 파업 노동자들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시리자는 몇 년 동안
매우 강력했던
각종 사회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고 그 점에서는 쿠벨라키스 동지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포데모스의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의 글을 읽어 보면 그 점이 잘 드러나는데, 그는 어떻게 EU라는 틀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긴축에 도전할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바로 이런 개혁주의 프로젝트를 시리자와 포데모스 둘 다 추구했고, 그리스에서는 그것이 시험대에 올라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과거 개혁주의자들의 말 뒤집기와 비교해 보면, 예컨대 이 나라에서 [노동당 총리] 해럴드 윌슨이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벌인 유탄이나, 1980년대 초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의 유탄과 비교하면 시리자의 유탄은 더 해롭습니다.

쿠벨라키스 동지도 지적했듯이 시리자의 개혁 강령은 매우 온건한 것이었음에도 박살났고, 이제 시리자는 긴축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래는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공약으로 선출됐는데도 말이죠. 불과 일주일 전에만 해도 시리자는 긴축 거부 운동을 적극 벌였고, 그 결과 다수 그리스인들을 설득해 냈었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시리자의 유탄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몇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건 완전히 시간 낭비죠. 그보다는 그들의 전략에 담긴 그릇된 논리를 되짚어 보기 위함입니다. EU와 자본주의 전체가 심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 시기에 그들은 체제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체제의 틀”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국가라기보다는 EU였습니

한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둘째 교훈은 자본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논평가들은 EU 지배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미쳤거나, 케인스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등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오판입니다. 지금 EU 지배자들은 자본의 논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유럽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 경제 모델인 독일 자본주의 모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수출을 기반으로 하며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모델, 수출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이 경제를 운용하는 그 경제 모델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고약한 성격이나 경제학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EU가 지금 이토록 잔혹하고 가혹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이 그만큼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가 엄청난 문제들로 허우적대는 역사적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경제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보들을 기억하시나요? 당장 오늘 중국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2015년 6~7월에 중국 증시는 30퍼

센트나 급락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고, 체제를 이루는 각 부분 부분마다 기존 입지를 지키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나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노동계급입니다. EU 지배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덜 조직된 노동계급 부분에 기필코 그 비용을 가장 많이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셋째 교훈은 개혁이나 혁명이나에 관한 것입니다. 쿠벨라키스 동지는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 수준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지난 200년에 걸친 노동계급 투쟁 경험의 정수를 집약하고 표현하려 하는 이론적 전통이라는 점도 봐야 합니다. 혁명가들이 때로는 개혁주의를 매우 판에 박힌 방식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역사에는 우리가 준거점으로 삼아 비판해야 할 개혁주의의 경험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시리자를 개혁주의 정당으로 봐선 안 된다”는 쿠벨라키스 동지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 보면, 시리자는 고전적인

개혁주의 정당이 아니고, 그리스 사회당과는 다르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오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그리스 사회당도 처음에는 영국 노동당 같은 고전적 사회민주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컨대, 그리스판 블레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 그리스 사회당 정부의 총리[코스타스 시미티스]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게릴라 투쟁에도 참여한 바 있는데, 영국 노동당에는 그런 전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스 사회당도 상당히 이례적인 개혁주의 정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리자가 현재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혁주의의 일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신종 개혁주의는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 등의 사회자유주의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 관련 영상 추천

그리스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그리스 시리자의 집권과 몰락

-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스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그리스 시리자(금진좌파연합), 집권과 몰락의 교훈

youtu.be/vNmQfKkyvGY

다. 이 전략은 파멸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번에 검증됐습니다. 그런 방식은 시리자의 경험을 통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정당이 필요한가

그리스에서 배울 넷째 교훈은 정당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논쟁에서, 쿠벨라키스 동지는 시리자가 아주 독특한 종류의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자가 여러 좌파의 동맹이고 그 안에는 혁명적 좌파도 있다고 강조했죠. 시리자가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강력했던 그리스의 각종 사회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리자는 분명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 정당이 집권해서 매우 고전적인 형태의 시험대에 올라 보여 준 결과가 바로 어젯밤 의회 표결입니다. 시리자는 선거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집권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지난번 논쟁에서 쿠벨라키스 동지는 안타르시아(SWP의 그리스 자매단체 SEK가 참가한 반자본주의 좌파연합입니다)가 전략적으로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해봅시다. 시리아야말로 전략적으로 패배한 것 아닙니까? '좌파 플랫폼'[쿠벨라키스가 이끄는 시리자 내 좌파 의견그룹]은 또 어떻습니까? 어젯밤 좌파 플랫폼의 행보는 별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 좌파 플랫폼은 시리자 지도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쿠벨라키스 동지도 말했듯이 대안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타르시아

그런 행동에 나서려면 의회 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경한 반대파가 될 태세, '시리자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냐'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자 정부를 무너뜨릴 순 없다'는 생각을 일단 받아들이면 그 정부와 그 정책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긴축에 맞선다는 시리자의 전략은 파산했다. 2015년 당시 EU 집행위원장 융커와 악수하는 시리자 대표 치프라스

쿠벨라키스 동지가 옛 개혁주의 정당들의 경험과 시리자를 비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좌파 플랫폼] 의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1970년대 영국의 월슨이나 켈러헌 [노동당] 정부 시절의 노동당 좌파가 연상됩니다. 전혀 새롭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봤던 모습들입니다.

어젯밤 좌파 의원들은 의회에서 긴축 수용안에 일사불란하게 반대 투표하고 거리로 나와 합의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을 일으키자고 호소했어야 합니다. 좌파 플랫폼이 미래를 도모하려면 거리로 나와 안타르시아 동지들과 단결해, 긴축에 반대하고 정부에 도전하는 더 광범하고 더 단결된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선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일요일 국민투표에서 시리자를 믿고 긴축 반대 투표를 했던 사람들을 시리자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시리자의 이 모든 경험이 어떤 조직을 건설할 것이냐에 관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범좌파를 건설하는 등의 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론적으로 명료한 마르크스주의적 중핵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핵을 건설하려면 고고하게 고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의 다른 일

부와 협력하고 더 광범한 운동의 일부가 되면서도, 이론적·전략적 일관성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시리자 안에서 활동하는 좌파들은 독자적 행동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되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시리자 정부와 단절해서 거리로 나갈 때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그리스에서 배울 마지막 교훈은 자력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금 국민투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는 여는 투표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회를 깊숙이 파고들었던 투표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계급이 사회의 더 광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이었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반대표 찍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투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잡히고 시일이 워낙 빨랐던 탓에, 어느 좌파도 긴축 반대 투표를 제대로 벌이기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국민투표는 그리스 대중이 스스로 참여를 조직한 투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표는 혁명적 정치의 기본 전제에 관해 아주 심오한 것을 말해 줍니다. 혁명적 정치의 기본 전

제는 노동계급이 스스로 조직하고 해방시킬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스에서 우리는 그런 잠재력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간 벌어졌던 많은 저항들이 단지 정부의 행태 때문에 모두 수그러들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대중이 내디딘 일보전진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만만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나 유럽의 지배계급에게는 골칫거리이겠지만 우리에게서는 희망입니다.

시리자 소속이든, 안타르시아 소속이든, 다른 어느 조직 소속이든, 심지어는 어느 조직에도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그리스의 급진좌파와 혁명적 좌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데 단결해서,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긴축 반대 운동을 대변하기 위해 펼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파 플랫폼에 관해 제가 화가 나는 점은 그들에게 그럴 대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긴축 반대를 찍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우리는 다수의 목소리다"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그리스에서 좌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이 이런 일에 나선다면 '경기 종료'는 아직 한참 후의 일일 것입니다.

블링컨·시진핑 면담

충돌 위험성 일시 낮춘 듯하지만
근본적 갈등 요인 여전

“대화 폭 넓히는 미중,” “미중 갈등 숨 고르기,” “미중 관계 개선 물꼬.”

미국 국무부 장관 앤터니 블링컨의 방중 결과를 두고 언론들이 뽑은 제목들이다.

그러나 지난 18~19일 블링컨의 베이징 방문은 수년에 걸쳐 누적돼 온 미·중 간 갈등의 궤적을 바꾸지 못했다. 심지어 그럴 의도조차 없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상대를 다루는 방식에서 일종의 돌파구나 변화를 이루려는 의도로 베이징에 가는 게 아니다.”

블링컨은 베이징 방문 동안 중국 외교의 투 톱인 친강 외교부장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잇따라 만났고 시진핑 주석과도 면담했다.

그러나 양국 회담의 유일한 결과물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바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미·중 관계가 얼마나 악화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회담 결과에 흡족함을 나타냈다. “그[블링컨]가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충돌로 비화하지 않게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

시진핑도 비슷하게 말했다. “양국이 역사·국민·세계를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중·미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양국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분리에서 위험 완화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 국무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미국 국무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였다. 폼페이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블링컨은 애초 올해 2월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미국과 중국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국산 고고도 기구(풍선)가 미국 영공에서 발견됐다.

중국 정부는 이 풍선이 기상 관측을 위한 민간용 비행 기구이며, 편서풍을 타고 우발적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국 군사 시설을 촬영한 정찰 풍선이라고 주장하며 격추했다. 블링컨은 “방문 여건 부적합”을 사유로 방중 계획을 취소했다.

얼마 뒤 미국은 입장을 바꿨다.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이렇게 밝혔다. “정보 당국은 비행체들이 상업 또는 연구 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일 수 있다는 가설을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 악화의 뿌리는 훨씬 깊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28년께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80퍼센트 수준이다.

미국 지배계급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가 미국의 지정학적 우위를 뒤집을까 봐 우려한다. 중국이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군사적·정치적 면에서도 미국을 대체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기우만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 이런 위협을 예방하고자 한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미국 해군과 공군이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군사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을 사실상 봉쇄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디커플링)를 시도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 정도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발전시켜 온 긴밀한 관계 등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는 실로 어려운 과제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에 공급망 분리에서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위험 완화(디리스크)로 방향을 조정하는 중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이렇게 말했다. “디커플링은 큰 실수다. ... 디리스크는 맞지만, 디커플링은 절대 아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최근 ‘탈중국’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꼭 1년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탈중국론’을 불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공감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6월 21일 자)

블링컨은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진핑도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블링컨과 중국 고위 관리들의 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양국의 충돌 위험 수위를 낮추는 데는 얼마간 성공했는지 모른다. 한반도 주변에서 국가들 간 긴장이 격화되는 것보다 완화되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블링컨이 시진핑을 면담한 이튿날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고,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는 상황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 험난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렇듯 경쟁국 간의 대화 그리고 일시적인 미세 양보가 국제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경쟁, 군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DNA에 아로새겨져 있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 대전, 냉전, “테러와의 전쟁”—이것들은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체제의 논리적 결과였다.

김인식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미 국무장관 블링컨: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 미국의 중동 딜레마

6월 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미국 국무부 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미국이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도 작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미국 지배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에 군사 안보를 지원하며 정권의 유지를 보장해 왔고, 그 대가로 걸프 지역의 막대한 석유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중국의 대중동 영향력 증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블링컨의 방문 직후 아랍·중국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열고 중국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다. 양국 간 경제 교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교역국이고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월 중국은 적대적 경쟁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정상화 합의를 주선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교역국이며, 이란의 (10년 연속)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 4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걸프 지역의 또 다른 친미 왕정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 시설 건설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수도 아부다비 인근 항만에 건설되는 이 시설은 2021년 바이든이 두 차례나 아랍에미리트의 지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 건설이 중단됐었다.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 힘의 상대적 약화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졌다가 결국 패배해 철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하면서 중동에서 이전보다 힘을 빼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동의 적성국 이란과 2015년에 핵 협상을 타결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짓고 중국에 집중하고자 했다.

후임 대통령 트럼프는 오바마와 이란의 핵 협정을 일방으로 파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랍·중국 비즈니스 컨퍼런스’ 이런 대규모 투자 계약은 확대되는 아랍·중국 협력을 보여준다

그도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직접 개입을 축소하려 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동맹 강화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려 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미국의 중동산 석유 의존도는 더욱 감소했다. 미국 내 셰일 가스 개발도 이런 변화 과정을 촉진했다.

전략적 가치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이동과 지정학적 변화는 걸프 왕정들을 비롯한 친미 아랍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 이 국가들은 친미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와의 정치·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중동 지배자들이 오랫동안 미국에 의지했던 것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런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중동 지역 지배자들을 적극 후원하고, 반대로 미국에 개기는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억눌렀다.

1953년 당시만 해도 친미였던 이란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자, CIA는 쿠데타를 사주해 정부를 전복시켰다.

미국은 때로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도 했는데, 199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이라크 침공, 시리아 내전 개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컸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지대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막대한 전략적 힘의 원천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물질적 보고 중 하나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걸프 왕정들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과 중동 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배자들이 품고 있던 의구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9년 6월 이란이 미국의 감시용 드론을 격추하고, 9월에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아무런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 지배자들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바라보게 됐다.

자본 축적

지난 2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왕정들은 나름 자본 축적의 중심을 마련했다. 이를 발판 삼아 선진 경제 국가들과 중동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자본과 천연자원을 무기로 힘을 키워 왔다.

걸프 왕정들은 2011년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반란의 물결을 막고자 반혁명 세력을 적극 후원하는 데 이런 경제력을 사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지배자들은 미국이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가 혁명에 의해 전복되는데도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었다. 이들은 혁명의 물결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2011년 3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위기에 처한 바레인 왕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의 장군 엘시시가 감행한 군사 쿠데타에 80억 달러를 후원했다.

또, 반혁명을 확산하고 동시에 경쟁자인 이란의 영향력을 제약하고자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에도 개입했다.

중동 국가들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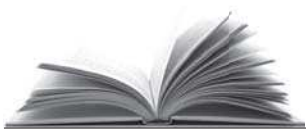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지난해 7월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완화할 석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면전에서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압력도 거스르며 오히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러시아와 보조를 맞췄다.

걸프 국가들이 친미 일변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지역 강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물론 중동은 막대한 천연 자원의 보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을 것이며, 억압적인 중동

▶ 13면으로 이어짐



서평 | 《한국전쟁의 기원》(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에 대한 주류적 설명을 반박한 역작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이 완역돼 나왔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1981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됐고, 국내에도 그중 1권이 일찌감치 번역됐다. 그러나 2권까지 포함한 책 전체가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한국전쟁 종전 70년이 되는 해다. 정확히 73년 전 이맘때 한반도는 냉전의 격전장이 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 여파는 지금도 남아 있다.

‘한국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살아 있는 논쟁이다. 윤석열 같은 우파에게 이 전쟁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두 나라가 적으로 상대했던 한국전쟁의 의미도 재조명되는 듯하다. 5월 윤석열이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 당시 중국 군에 맞선 미해병의 “기적 같은 성과”를 칭찬하자, 다음 날 중국 외교부가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은 바로 한국전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역작이다.

화약통

1945년 8월 한국인들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당시 한국에서 수십 년간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대중 참여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됐다고 썼다. 대중의 변화 열망이 반영돼 정당, 인민위원회, 노동조합 같은 조직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그러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됐다.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대중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다.

완전한 독립과 해방이 이뤄지지 않



폭격으로 벽만 남은 집 커밍스는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다

는 데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그만큼 컸음을 미국도 알고 있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의 정치고문 메릴 베닝호프는 당시 남한을 “불꽃을 대면 즉시 폭발할 준비가 돼 있는 화약통”에 비유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후 미국 안보 정책에 한국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대국(소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래서 미군은 한국에서 소련과 ‘공산주의’의 영향을 막는 “방벽”을 쌓는 데 주력했다.

미군은 경찰 같은 일제 관료 기구를 존속시켰고, 일제에 협력했던 “보수주의자들”을 등용했다. 남한에서 대중운동을 파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지방 인민위원회 등이 강력한 탄압으로 파괴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대중의 열망을 꺾는 과정은 피로 물들었다. 일례로 1946년 10월 대구 봉기를 진압하면서, 적어도 1000명 넘는 사람이 숨지고 3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 1948년 4·3 항쟁 당시 제주도에서는 미국 자료에서만 1만 5000~2만 명의 도민이 숨졌다고 기록됐다.

그렇게 건국된 국가는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커밍스는 남한 국가가 “경찰국가”였고, 대중적 지지 기반이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북한을 향해 적의를 한껏 드러냈다.

냉전

한반도의 갈등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 고착과 맞물려 돌아갔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나오고 마셜 플랜이 시작됐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이는 한반도 상황에 악영향을 줬다.

특히 1949년 중국 혁명의 승리와 소련의 핵실험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단호한 정책”을 펼 필요가 커졌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봉쇄하고 실행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위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한 까닭이었다. 이 결정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다.

결국 1950년 6월 한반도는 열전에 휩싸였다. 브루스 커밍스가 보기에, 이 전쟁은 1950년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일제 시대에서 기원한 한반도의 내부 갈등과 냉전이 맞물린 결과였다. 또한 미국의 세계 전략이 한반도에 일으킨 비극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전쟁이 내전의 성격을 띤 국제전이라고 본다.

전쟁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다. 커밍스는 여기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미국은 대대적인 폭격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을 살상했다. 당시 미 전략공군사령관 커티스 르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3년 넘게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범 옮김,
글항아리, 전 3권 1984쪽, 110,000원

모든 마을을 불태웠다.”

한국전쟁은 냉전 속 열전이었고, 또한 냉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커밍스는 이 전쟁이 미국에게 “자국의 패권을 구축하고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한국전쟁은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 필요한 “거액의 국방 지출을 가능하게 만든 위기”였다. 일본도 한국전쟁을 기회로 산업을 재건하고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적(우파적) 설명에 대해 지금도 유용한 반박을 제공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을 미국·소련·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힘을 겨룬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서 한국인들에게 “큰 행동의 자유”를 줬다고 보거나, 소련의 전쟁 관여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기도 한다.(이번 한국어판 서문에서 브루스 커밍스는 자신의 전반적인 의견은 변함없으나,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소련이 전쟁에 더 강력하게 개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국전쟁의 진정한 교훈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서가에 둘 만한 고전이다. 국내에서 여전히 우파 정부가 민간인 학살 등 전쟁의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김영익

▶ 12면에서 이어짐

정권들에 대한 군사 지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걸프 국가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초조해하고 있다. 걸프 지역 지배자들은 미국의 이런

탈레바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 지배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구실로 자국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며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 등 중동 지배계급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동에서 군사적 개입을 해 왔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리아·리비아·예멘·수단 등에서 벌어진 분쟁과 내전에 개입했다.

그리고 각자의 셈법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듯 중동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중동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박이랑

1948년 6월, 무려 142페이지짜리 논문이 당시 영국 트로츠키주의 단체인 혁명적공산당(RCP) 내부 회보에 실렸다.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그 저술은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인 이주민이자 당시 31살이던 이가엘 글룩슈타인이 쓴 것이었다.

글룩슈타인은 앞서 팔레스타인에서 소규모 유대계 아랍인 마르크스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스탈린주의가 좌파를 주름잡는 현실에 도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아랍인들을 강제로 내쫓고 수립된 이스라엘 국가의 권력을 쥘기에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노동계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글룩슈타인은 해외 이주를 결심했다. 처음에는 이집트를 고려했는데, 그곳의 아랍 노동자 운동이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네트워크가 너무 작아서 지하 활동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차에 글룩슈타인은 영국으로 여행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동지 하니 로젠버그의 아버지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자그마한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글룩슈타인은 그 공장의 대표 신분으로 1947년 영국 땅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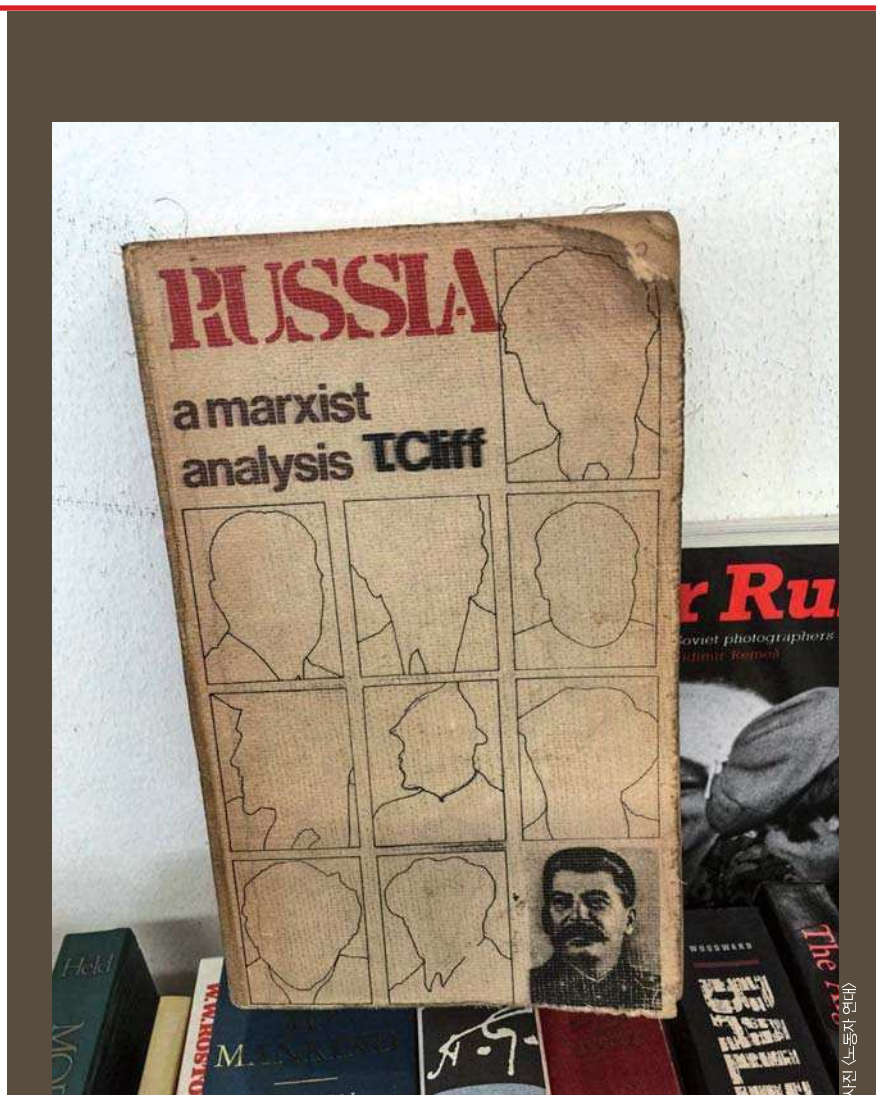
영국에서 글룩슈타인은 당시에 회원이 400명이나 되는 혁명적공산당에 가입했고, 당원들 사이에서 생각이 깊고 예리한 마르크스주의자로 빠르게 인정받았다.

석 달 후 영국 당국이 그를 찾아내 강제 추방했다. 글룩슈타인은 우여곡절 끝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트리니티 칼리지 학생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1952년 영국 입국이 허용될 때까지 글룩슈타인은 아일랜드에서 거주했다.

거기서 클리프는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본질>을 썼다. 글룩슈타인이 각장의 원고를 바다 건너 영국으로 보내면, 영어와 히브리어가 뒤섞인 그 원고를 한데 모아 단일한 저술로 편집하는 고된 작업을 [이제 글룩슈타인의 배우자가 된] 하니 로젠버그가 맡았다.

글룩슈타인은 이후 필명인 토니 클리프로 더 잘 알려졌다. 당시 그가 쓴 저술(이후 책으로 출판됐다[국역: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책갈피, 2011])을 기초로 《사회주의 평론》 그룹이 결성됐다. 《사회주의 평론》 그룹은 혁명적공산당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클리프와 그 동료들이 출당당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사회주의 평론》 그룹은 ‘국제 사회주의자들’을 거쳐 [1977년]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됐다. 클리프의



토니 클리프, 《소련 국가자본주의론》 출간 75년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계급 자력해방 원칙을 수호하다

토니 클리프는 75년 전 이달에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본질>(초판 제목)을 출간했다. 그 저작 덕분에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이라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스탈린주의의 왜곡에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조셉 추나라**가 주장한다.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이론은 혁명적공산당 등이 옹호한 트로츠키주의 정설에 도전했다.

트로츠키주의는 스탈린주의가 소련을 장악한 뒤에도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레온 트로츠키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로서 레닌과 함께 엄청난 권위를 누린 인물이다. 러시아 혁명과 그 여파는 사회주의와 해방이 짧게나마 만개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신생 혁명 정부는 고립됐고, 1918년 독일에서 시작된 혁명 운동이 실패하면서 고립이 특히 더 악화됐다. 혁명 후 러시아는 혹독한 내

전과 외세의 공격에 시달렸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갓 태어난 사회주의 국가를 분쇄하려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볼셰비키당은 권력을 지킬 수 있었지만, 노동계급의 대다수가 죽고 경제가 파괴됐다. 이런 변화 탓에 소비에트(혁명을 통해 설립된 노동자 평의회와 병사 평의회) 같은 민주적 조직들이 쇠퇴했다.

원래 볼셰비키는 1917년 혁명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혁명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에 집중했다. 혁명이 확산돼서 러시아가 훨씬 더 큰 해외[특히 독일] 노동계급의 지원을 받기를 바랐다.

피의 강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국가를 관리하는 관료들은 아직 남아 있던 노동계급과는 분리된 집단을 형성했다. 볼셰비키(이제는 공산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로 신입 당원들이 밀려들어 왔는데, “선임 볼셰비키”와 달리 그들 중에는 사회주의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 허다했다.

이처럼 부상하던 국가 관료를 이오시프 스탈린이 지도했다. 1920년대 말 스탈린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며 트로츠키를 추방했고, 이후 [1936~38년 모스크바 재판을 통해] “선임 볼셰비키”를 거의 모두 무참히 살해했다.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목표 대신에 “일국사회주의”[소련 한 나라에서만도 무계급 사회가 가능하다는 공상]가 채택됐다.

트로츠키는 계속해서 스탈린주의에 맞섰지만, 그의 분석에는 종종 결함이 있었다. 트로츠키는 소련이 “변질”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국가”라고 봤다.

트로츠키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여전히 법적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공산당의 건강한 인사들이 노동계급과 동맹해서 관료들을 물리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트로츠키의 이런 견해는 관료가 당시의 물자 부족 상황을 관리할 필요 때문에 부상했다는 견해와 관계있었다. 그는 관료를 실질적인 사회 기반이 없는 비교적 미약한 세력으로 봤다.

트로츠키는 1940년 스탈린이 보낸 킬러에게 암살당했다. 그의 계승자들은 더 큰 난제와 씨름해야 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동유럽에는 소련과 사회 형태가 비슷하고 소련처럼 관료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들어섰다. 그런 정치체제는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소련 군대에 의해]

▶ 15면으로 이어짐

▶ 14면에서 이어짐

위로부터 세워졌다.

당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그런 정치 체제를 두고 “변질된 노동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국경 너머로 군대를 주둔시켜 노동자 국가를 세울 수 있다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말해 온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또, ‘노동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경제도 국가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혁명가들이 그런 국가를 위해 투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클리프의 이론은 이런 난제에 돌파구를 냈다. 클리프는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결코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국가라고 봤다.

소련에서 결정적 변화는 1920년대 말에 일어났다. 스탈린이 지도하는 관료층이 [1928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처음으로 강행했을 때였다.

소련은 집단농장을 통해 농민들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착취하면서 급속히 산업화됐다. 이제 국가 관료층은 응집력 있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했다.

산업화는 노동자들의 소비보다 자본 축적이 더 중시되는 것을 수반했고, 이 점에서 서방과 똑같았다. 바로 이를 위해 관료는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다시 말해, 무보수 잉여 노동을 노동자들에게서 뽑아내어 관료의 집단적 목표를 위해 사용했다.

국가 관료가 경제를 관리했고, 이는 마치 여러 부서로 나뉜 하나의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일견 비슷했다. 그러나 소련 경제는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소련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일정한 입지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열강과의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뜻했다.

국내적으로는 시장 경쟁이 사라졌지만, 국제적 군사 경쟁을 통해 자본주의



1985년 1월 영국 광원 대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연설하는 토니 클리프

의 논리가 소련에 관철됐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 경제가 [형태상으로도] 서방과 똑같았다는 것은 아니다. 클리프는 자신의 저작에서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적 역학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역학은 착취와 축적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변주곡이었을 뿐이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사회주의”

냉전 시기에 SWP와 그 전신의 회원들은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라고 불렸는데, 그만큼 국가자본주의론이 핵심적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론 덕분에 그들은 스탈린주의 체제와 일절 타협하지 않고, 또 노동자 혁명이 아닌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

동시에, 소련을 자본주의의 일종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이 특히야 만적인 사회 형태라는 견해도 거부했

고, 그 덕분에 서방 지배계급을 지지하는 함정도 피할 수 있었다.

한때 <소셜리스트 워커>[당 기관지] 제호 옆에 실리던 슬로건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사회주의”는 이런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은 냉전이 끝났어도 유의미하다. 국가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온전히 관료적인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지 않은 나라들에도 있다.

클리프의 이론은 국가가 자본주의 바깥에 있거나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틀렸고, 국가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사회간접자본을 사영화하지 말고 정부가 운영하라는 요구를 지지할 수 있지만, 국유화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되려면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하고, 이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자본주의 방식이

부분적으로 재도입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취약해지면서 국가가 체제를 구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도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에서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도하는 기업들이 계속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 등 다른 정부들은 국가가 더 분명한 경제적 구실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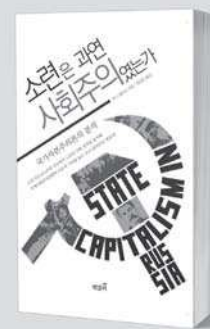
영국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을 만난 후 워싱턴에서 했던 연설을 들어 보면, “국가의 능동적 구실”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겠다는 언급으로 가득하다.

국가를 이용해 영국 자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노동당의 계획에 아무런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을 보여 준다는 환상 역시 조금도 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본주의 열강,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클리프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사상, 즉 노동자들의 자체 활동만이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출처 Joseph Choonara, 'Tony Cliff's revolutionary analysis' (2023. 6. 19) / 번역 김중환

📖 추천 책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

토니 클리프 지음
책갈피, 496쪽, 22,000원

▶ 16면에서 이어짐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대책에서 드러난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에 이들 학교를 폐지하기로 한 계획을 뒤엎은 것이다.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

서 자사고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주호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고 늘리기 정책의 주역이었다.

또,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전국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과거 일제고사는 학교 간 경쟁을 과열시켜 학교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었고, 학생 간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을 조장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라는 것은 ‘명문’ 대학에 진학할 ‘정예’와 평범한 노동계급에 속하게 될 아이들을 더 어린 나이에 가르자는 것인 듯하다. 고고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초·중학생 때부터 줄 세우기 시험을 강요하니 말이다.

이런 줄 세우기가 부유층 자녀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이 촌촌하게 서열화돼 있고, 조

금이라도 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야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완화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교 서열화 정책과 일제고사 추진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좌파적 대중 운동으로 커져야 치열한 입시 경쟁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

강동훈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각급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밀밥 깔기 (초·중·고·대)

2024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문항이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결국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자진 사임했다.

윤석열이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업계를 문제 삼자,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사교육 업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연봉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일타 강사'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전직 수능 출제자가 문제집을 만들어 파는 일이 폭로됐다.

또, 정부는 7월 초까지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6월 26일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어지간한 교사나 전문가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킬러 문항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수백만 원씩 받고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명문대와 의대 진학을 돕는다는 입시 학원의 광고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킬러 문항' 삭제만으로 입시 경쟁 부담이 완화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의 발언은 대다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서 당연히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 몇 개를 삭제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격화되는 입시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의 발언 후에 수능이 쉬워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게 '물수능'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하게 말해,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두 개 대신 '어려운' 문제 개수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킬러 문항을 위한 사교육 대신에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사교육이 유행할 것이 뻔하다.

사교육비 감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으로는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거의 없었다.

2010년 정부는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올려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 실제로 시행 직후에는 사교육비 총액이 조금

줄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다시 사교육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EBS 교재 연계율이 50퍼센트로 줄어들었다.

2014년 정부가 수능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도 사교육비 감소를 노린 정책이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2015년부터 매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영어뿐 아니라 전체 사교육비 부담도 갈수록 커졌다. 정부가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 400억 원에서 지난해 25조 9538억 원으로 29.5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 2000원에서 지난해 41만 원으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처럼 입시 제도 변경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한국의 입시 경쟁이 명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상대평가 경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능을 쉽게 내면 내신과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식으로,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타 강사'들의 '돈 자랑'이 꼴불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 입시 경쟁의 원인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타 강사'들을 비난하고 수능 난이도를 문제 삼는 것은 데마고기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윤석열의 발언 직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2강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일시 | 6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628-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